

“농어민도 국민이다 농어촌 말살 선거구 획정 중단하라”

전국 농어민 1천500여명 2차 상경집회... 국회 잔디광장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농어촌 선거구 사수 2차 결의대회에서 전국의 농어민들이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농어민도 국민이다”, “농어촌 말살 선거구 획정 중단하라”

농어촌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는 외침에는 호남과 영남, 충청과 강원도는 물론 여와 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의 농어촌 지역 주민 1천500여명이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주권과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6일에 이어 다시 한번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항의방문하고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결사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어 농주모)’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2차 상경집회를 갖고 “농어촌 지방 외면 말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여수갑, 나주·화순, 광양·구례, 곡성, 장흥·영암·강진, 해남·완도·진

도 선거구 주민들을 비롯해 무안·신안, 고흥·보성 등 전남과 전북·강원·경북·충북 등지의 농어민 1천500여 명과 황주홍·신정훈·이개호·김승남·이윤석·강동원 의원이 참석했다. 또 새누리당에서 황영철·한기호·염동열·이이재·장윤석 의원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참석 농어민들은 이날 “1차 집회를 통해 농어촌과 지방을 배려한 선거구 획정 등을 촉구했지만 여·야 지도부는 말만 있을 뿐 아무런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선거구 획정 협상 즉각 개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13일) 준수, 농어촌 대표성 확보기준 마련,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농어촌이 호구냐”, ‘비례대표 없애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편 ‘농어촌 죽이기 결사

전남·북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호남 선거구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전남·북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주권과 대표성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전국 400만 농어민들의 함성을 다시 확인한다.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인 호남에서 농어촌 선거구가 단 1석이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호남인들의 거대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긴급 회동을 통해 우리 당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긴급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야간 지도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비례대표 의석 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향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전국 농어민과 호남 지지자들의 뜻에 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

농어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호남의 지역 대표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우리 당의 존립 필요성을 달리 찾지 못할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호남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당 문재인 대표께서 오는 11월 13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내에 양당 지도부의 획기적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명한 지도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5. 10. 27.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전북 국회의원 일동

반대’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했다.

황주홍 도당 위원장은 이날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대해 지도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향적 유연성을 발휘해 전국 농어민과 호남 지지자들의 뜻에 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호남의 지역 대표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우리 당의 존립 필요성을 찾지 못할 것”이라며 “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여야 간 지도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황주홍 위원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양당 대표가 물꼬를 터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비례대표 문제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새누리당은 의원정수에 대해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북 지역구 국회의원들 10월 27일 국회 회동

“농어촌선거구 문재인대표 결단촉구” 공동성명 “비례축소·의원정수 확대 등 모든 방안 검토를”

황주홍·유성엽 전남·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호남 선거구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황주홍·유성엽 전남·북 도당 위원장을 비롯, 박지원·김성곤·주승용·신정훈·이개호·김승

남·김영록·이윤석·전정희·강동원·박민수·김춘진·이상직·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수와 국회의원 정수

“위기에 처한 농어업을 살리시다” 대한민국 농어업 자주선언

도당 농어민위원회 발대식... 5일 나주 한전KDN 강당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광덕)가 대한민국 농어민의 자주선언이라 할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다.

도당 농어민위원회는 5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KDN 빛가람홀에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농어민위원장(나주·화순), 강인규 나주시장, 농어민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현장 정책토론회를 갖고 출범의 뜻을 올렸다.

문재인 대표는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농어업은 농어민의 생계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식량주권의 문제”라며 “거센 시장 개방의 흐름 속에서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당 농어민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전남을 더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토론에 나선 신정훈 전국 농어민위원장은 ‘농어민을 위한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한 당 농어민위원회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생정치의 보루이자 전국 농심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창립선언문을 통



전남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광덕)가 지난 5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KDN빛가람홀에서 500여명의 당원,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해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생명산업이다.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과 먹거리를 살려 농민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국 농어민위원회는 전국 시도위원회별 발대식을 마치고 오는 12월 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당,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 범도민 서명운동’ 실시

“우리의 선거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킵시다”... 1만5천여명 서명 받아



전남도당 당직자들이 지난달 22일 화순 힐링푸드 축제 현장에서 화순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농어촌 선거구 사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범도민 가두서명운동이 실시됐다.

전남도당은 지난달 16일부터 10일간 도당 산하 10개 지역위원회별로 ‘우리의 선거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킵시다’는 제목으로 도내 주요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일제히 가두 서명운동에 나서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당, 각 지역위원회 당직자 등이 전원 참석해 가두 서명

에 나서는 한편, 농어민의 주권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의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도당 김현호 수석 사무처장은 “10%도 되지 않는 농어촌 선거구를 줄여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300만 농어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5천만 국민의 정서적 보급자리인 농어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호소했다.

‘민집모’ 의원들, 9일 성명 발표

“문재인 대표 총선승리 비전 밝혀야”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문재인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김영환, 오제세, 김동철, 장병완, 황주홍, 유성엽, 최원식 등 11명의 당내 비주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당 내외에서는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승리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문 대표는 거듭되는 재보선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고 총선승리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 대표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지지층을 복원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할 비전을 밝혀야”고 촉구했다. 한편 민집모는 당초 예정했던 2차 혁신토론회를 이번 주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개최 시기 등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당, 노인사랑 급식봉사활동 펼쳐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은 지난 4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봉사단체인 ‘1390 행복봉사단’과 함께 무안군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노인사랑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급식 봉사활동에서 전남도당과 전남도 선관위 직원들은 “선관위와 정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다할 것”을 노인들에게 약속하며 150여분의 점심을 챙겨드렸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과 정의당, 민주당 도당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10·28 재·보선 함평도의원 선거, 정정희 후보 당선

득표율 47.25%로 무소속 후보 2명 누르고 승리

전남 3곳의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한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유일한 도의원 자리였던 함평 도의원 선거에서 우리 당 정정희 후보(49·지역위 부위원장)가 당선 영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신안나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동근 후보(62)가 무소속 최승환 후보(53)에게 고배를 마셨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를 내지 않은 목포라선거구 시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이재용 후보(62)가 당선됐다.

함평 도의원 재보선에서 정정희 후보는 47.25%(3천369표)를 얻어 무소속 설명수, 이재인 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국 2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함평 도의원 선거가 45.8%로 전국 광역의원 선거 투표율(평균 15.3%)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종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수 106만7천487명 중 21만4천812명이 투표해 20.1%를 기록했다. 전남은 42.5%였다.



이개호 의원(사진 왼쪽 첫번째)이 10.28 함평 도의원 재보선 선거유세 현장을 찾아 운동원들과 함께 유세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당 성명서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 이념 교육 추진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 주입을 통한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36만 전남 당원들과 함께 전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친일과 유신체제를 미화해 논란이 된 '뉴 라이트' 계열의 필진이 쓴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2008년 출간된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였다. 교학사 교과서는 더욱 우편향적이고 서술 오류 등이 많아 지난해 역사편향 논란을 일으킨 끝에 일선 학교에서 결국 퇴출된 바 있다.

우리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1. 다양성의 가치를 외면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및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 독재를 미화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미래의 잘못된 길로 앞장서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국정교과서 입법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3.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늘어만 가는 가계 부채 대책과 청년 실업 해소, 서민 주거 불안 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정정희 당선자 인터뷰

“함평 발전과 전남의 미래 위해 뛰겠습니다”

“당에 대한 호남인 열망에도 부응할 터”



“임기 동안 함평 발전과 전남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도민을 섬기고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10·28 재·보선 함평2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정정희 당선자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 당선자는 “도의원 당선자로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농업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번영된 함평의 미래는 저의 꿈이자 모든 군민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 군민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미래 지향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 선거는 단순히 도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함평군민과 도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자로서 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당에 대한 호남인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신 함평군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군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알아두시라

최근 자주 묻는 정치관계법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문답풀이로 제공합니다.

[問 1] 당원협의회에서 사회봉사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연보호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

-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問 2] 당원협의회가 당원연수를 위한 집회를 개최(1박 2일)하면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

- 당원협의회가 선거일전 30일 전에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할 소속 당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14조에 위반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 전남 각계로 확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방 정치권은 물론 교단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남지역 237개교 역사·사회과 교사 1648명은 지난달 29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골자로 한 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제 2유신 역사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정화 추진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조차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르지 못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성명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민화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시의의회(의장 조성오)도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과 도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목포시의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을 정치도구화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의 저지를 다짐했다.

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다음날 오전 출근시간대에 목포 연산주공 3거리에서 국정화 반대 1인시위를 벌

였다.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지난달 30일 순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호남 4개 시·도의회 의장, 상생협력 결의

광주·전남·대구·경북 등 영·호남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양 지역의 주요 공동 현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이동희 대구시의의회 의장 등 4개 시·도의회의장들은 지난달 16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폐회 후 따로 만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달 말 영·호남을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의 역사적 확장·개통을 계기로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동서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다.

또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경북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협력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88올림픽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고



영·호남 상생발전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 왼쪽부터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이동희 대구시의의회 의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속도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4개 시·도의회사무처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강화 나선다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직원추천 조례’ 의결

전남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은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대상을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명시했다. 또 전출시에도 의장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의장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에 반영하고 인사발령 사항을 1일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우승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자체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현행법상 명백한 의회의 사무직원 인사추천 권한을 제도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숫자로 보는 정치

정치 현안과 관련된 각종 숫자와 통계 수치를 알기 쉽게 풀이합니다.

●10.2% : 2015년 말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통계청 자료). 지난 2007년 7.2%였던 청년실업률은 2009년 8.1%, 2013년 8.0%였던 것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10.2%로 높아져 청년 일자리가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39.7% : OECD가 지난 2013년 조사한 15~29세까지의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 참고로 한국을 포

함한 OECD 국가의 같은 해 평균청년층 고용률은 50%였고, 일본 54.6%, 독일 57.9%, 영국 59.9%로 나타났다.

●1만원 : 정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또는 정당 명의를 대민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당원에게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식사료를 제공할 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금액의 상한선.

“서민과 사회적 약자·농어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FTA 농어업 피해 보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추진 등 앞장

전남도당 소속 10개 지역위원회의 지역별 현황과 특성,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내용과 당직자 등을 소개합니다. ‘지역위원회 탐방’은 무순(無順)으로 연재합니다.

지역위원회 탐방

8. 고흥·보성

고흥·보성지역위원회 김승남 위원장(50·원내부대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80년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486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총학생회장과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부의장 출신의 김 의원은 1980년대 6월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경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1993년 문희상 의원의 천거로 당시 이기택 민주당 총재 비서로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용후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당에 들어가 정치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거듭해온 야당에 몸담으면서 두 차례의 큰 분당사태를 겪었으나 그 때마다 당을 지키는 잔류의 길을 선택했다.

분당 위기마다 당 지킨 486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의 분당 사태로 학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 대다수가 너도 나도 열린우리당에 합류할 때 그는 새천년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다. 앞서 민주화 운동 시절인 3김시대에도 신당 행을 마다하고 속칭 꼬마 민주당에 남는 등 고집스럽게 기존 야당을 지키는 길을 걸어왔다.

19대 총선에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하기까지 두 차례 선량(選良)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 포부를 밝히고 줄곧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소속된 김 의원은 특히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은 물론 자연재배농법 등의 보급에 직접 앞장서고 있다. 그는 공약사업인 자연재배농법 확대보



김승남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달 7일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장 국정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급에 적극 뛰어들어 지난 2012년 2ha로 시작했던 자연재배농법 단지가 2013년 10ha, 2014년에는 20ha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배농법은 친환경 농업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의 3무 농법의 농사를 지칭한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미생물만 사용해서 토양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가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무(無) 농업’ 자연재배법 보급 앞장

김 의원은 “현재는 벼농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다른 기초 농산물로 확대하고 브랜드화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배추값 폭등 사태처럼 매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왔다. 생산량의 불확실성이 큰 농산물은 특 하면 과잉 생산돼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 버려지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매년 농산물을 갈아엎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과학적, 체계적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해 정부가 유통구조개선 종합 대책(2013년)과 무·고추·마늘 수급조절 매뉴얼(2014년) 등을 수립하는데 앞장섰다.

이어 FTA로 인한 농업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기업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여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농어촌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도입과 시·군간 경계조정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기장군, 인천서울과 강화 등 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 4곳을 도·농간 경계조정에 의한 복합선거구로 지정한 바 있다.

또 고흥·보성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고흥 과학로켓센터 유치 △고흥우주센터, 거금대교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보성 휴양테마파크(치유센터) 조성 및 관광상품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흥 우주센터의 경우 로켓 발사 때가 아니면 센터를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승남, 누구인가?



- 1965년 고흥군 출생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1987)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석사)
- 민주당 원내총무실 전문위원(1995)
- 민주당 부대변인(2009)
-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2011)
- 제19대 고흥·보성 국회의원(2012)
-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2012)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3)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2014)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2014)



김승남 의원이 지난달 18일 고흥 우주마라톤 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보성 서편제 소리축제 현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중인 김승남 의원

**박지원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여당의 거짓말 시리즈 소개**



박지원 의원(목포)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피노키오라면 벌써 코가 땅에 닿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확립화된 역사 교육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정리한 정부·여당의 '거짓말 시리즈'를 소개했다.

"첫째,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대대적인 간첩 색출 및 검거를 하지 않기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배운다는 총리의 국회 답변은 고3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도종환 의원 질의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히는 등 6가지 거짓말을 나열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목포역 광장에서 시도의원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김성곤 의원,
빅 데이터 시대의 선거 세미나 개최**



김성곤 의원은 지난 3일 '빅 데이터 시대의 선거와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효율적인 선거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차기 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빅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유권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유권자의 바람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빅 데이터 선거에 대한 의견공유를 요청했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당직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주승용 의원,
"10·28 재보선 패배 뼈아파, 혁신실패 자인해야"**



주승용 의원(여수·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치러진 재보선 패배에 대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당 혁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보선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민심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 당 지도부로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혁신위를 구성해

혁신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특히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화난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크게 화합하고 더 크게 혁신하되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내부토론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1일 광명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재경여수고등문체육대회를 방문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신정훈 의원,
"반 분권적 행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복지, 교육단체 대표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반 분권적 행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 의원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대통령 취임 후에는 오히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지방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추진,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교육부의 누리예산 교육청 전가,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등은 대표적 분권화 역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화순 고인돌마라톤 대회에 참석,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
다중집합장소 수유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공공기관,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등에 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유실 설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부과 근거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았고, 수유실 위생기준에 관한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일명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으로 그동안 문제지적은 있었지만 사회적 공론화 부족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의원은 지난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3차 세계의원연맹총회에 참석, 테러리즘이란 주제로 발언 후 토론을 하였다.

<전남도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활동을 법정선거구 순으로 실습니다.>

이개호 의원, “정부출연기관 지방조직 유치 사실상 봉쇄” 주장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22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정한 ‘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이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 지침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분원 등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사전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 최소 30개월의 시범사업을 진행해

야 하고, 운영비 등 재정부담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하던 ‘비파괴검사기술 연구개발센터’ 구축 사업은 시범사업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출연기관의 신설·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침 폐기와 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10.28 재보궐선거 함평도의원 후보로 나선 정정희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 “천경자 화백, 금관문화훈장 조속히 추서해야”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지난달 28일 “최근 사망사실이 확인된 고흥 출신의 천경자 화백은 남성 중심의 미술계에 혁명파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며 “정부는 천 화백에 대한 금관문화훈장 추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천 화백이 1983년에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상황이고, 그 후 활동실적이 미미했고 또 돌

아가실 무렵에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있어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 및 국립현대미술관과의 불화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류작가로서 한국 미술사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천 화백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황주홍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선정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이 한국환경정보 연구센터로부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센터는 올해 국감에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개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정책대안의 심층도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국감장 방문 평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감을 통해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

된 목재제품의 유통을 지적하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적 3일 만에 총 50개 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쳐 기준을 어긴 제품을 수거했다. 또한 인천·부산항만공사, 수협·농협 등이 석면에 노출된 것을 보도하고, 해당 기관이 즉시 석면해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뇌물을 받고 바다에 폐수를 버리는 등 충격적 비리를 벌인 것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부각시켰다.



황주홍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농어촌 지방 주권지킴이 의원 모임 주최 농어촌 선거구 사수 2차 상경집회에 참석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 “역사쿠데타 비밀작업팀 해체” 요구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쿠데타 비밀작업팀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비밀기구를 만들어 국정화 작업을 추진해온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밀 조직을

구성해 역사 쿠데타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비밀작업팀을 통해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하고 여론전을 주도하는 등 여론조작과 공작정치를 펼쳐왔다”고 개탄하고 “이의 실체와 활동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즉시 교문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완도 고금면민의 날 유자 축제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윤석 의원, 무안·신안 예산정책 세미나 개최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신안 증도 옐도라도 연회장에서 무안·신안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길호 신안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지방의원, 핵심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안과 무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안의 14개 읍면에 다리를 놓고, 무안은 231km 해안도로를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는 반 이상의 섬에 자동차가 달리게 되고, 2019년 말에는 전국에서 50인승 비행기가 흑산도로 가게 될 것”이라며 두 지역이 대화합해 멋지게 지역발전을 이룩자”고 강조했다.



이윤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무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석, 축사를 했다.

정부 산하기관 인사 둘러싸고 ‘비선 그룹의 전횡’ 논쟁 촉발

권노갑 전 최고위원 측근, “YS 정권 때보다는 훨씬 투명” 주장

전남의 야당사

9. 새천년민주당의 권력투쟁(하)

권력의 2인자에게는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다. 사람이 넘쳐났던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마포 사무실 풍경은 김대중 정권의 권력 쏠림 현상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의 분쟁은 권력의 소유를 놓고 벌어진다. 과거 민주당의 정풍(整風)파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 권력의 독점에 대한 소외계층의 반발이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비선 그룹의 전횡’ 반발 부른 인사개입 의혹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 하나. 과연 권 전 최고위원으로 대표되는 동교동계는 당시 여권의 최대 권력집단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권 전 최고위원과 동교동계로 정보와 사람이 쏠렸던 역사를 인정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소장파들로부터 ‘비선그룹의 전횡’이라는 비난과 함께 집단반발을 불러올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서로 엇갈렸다. 동교동계와 민주당 소장파 인사들 사이의 시각 차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기 때문이다.

먼저 소장파의 시각. 문제를 제기했던 성명파 의원들이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권 전 최고위원과 동교동계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긴장감을 늦추고 사석에서 마주하면 권 전 최고위원의 인사독점을 비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A 전 의원은 “권 전 최고위원의 마포사무실이 뭐하는 곳이었느냐. 한마디로 동교동계 사람들 취직자리 알선하는 곳 아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무실 한편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 자리에는 누구를 보내고 또 다른 정부 산하기관 인사에는 누구를 보내고 하는 식의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정부 산하 공기업 인사가 이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동교동계와 연결해 권 전 최고위원의 ‘눈도장’을 찍는 일에 결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모였고 정보가 모였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당시 정가에서는 정부 산하기관 인사에 권 전 최고위원의 핵심측근인 L 의원과 K 전 의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권 전 최고위원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것이다.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굵직한 인사의 경우 마포사무실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진 등 요직인사에서도 권 전 최고위원의 영향력이 미친



2013년 11월 상도동계 출신인 김덕룡 전 의원과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이 참여한 정치모임 평화민주 국민동행이 출범했다. (사진=고려대 현대정치연구회)



2001년 5월 25일 신기남 의원이 당 쇄신 요구 성명서를 전 정배 의원에게 건네받고 있다. 당시 보스 중심 정당문화에서 보스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흔적이 드러났던 상황을 보면, 마포사무실과 그 사무실의 실질적 주인인 권 전 최고위원의 파워는 달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

당시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낙하산 인사가 김 전 대통령의 임기 말로 접어들자 그 정도가 심해져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YS정권 때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의 ‘계장급’ 자리까지 밀고 들어왔다. 솔직히 표현하면 지금까지 김대중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정도는 YS때만큼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과장급’까지 낙하산 인사의 표적이 되었고 그 횡수도 잦아져 직원들 사이에 불만 요인이 되었다”고 귀띔했다.

동교동계의 인사 독점을 고발하는 이런 주장과 달리, 당사자인 동교동계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중권 비서실장, 정치개입·인사청탁 강력히 견제

권 전 최고위원의 한 측근인사는 “솔직히 권 전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산하기관 인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한 뒤 “그

러나 아무리 권 전 최고위원의 추천이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엉뚱한 자리를 차지하는 식의 무리한 인사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국민의 정부 청와대 김중권 초대 비서실장의 막후 견제도 작용했다. 동서화합을 내건 DJ의 권유로 변호사로 지내다 정계에 복귀한 김중권은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측근과 동교동계의 정치참여와 인사개입을 강력히 견제했다.

“과거 잘 아는 사람이 권 전 최고위원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 간부직에 추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해당 정부 기관 쪽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 취업을 못했다. 제 아무리 권 전 최고의 추천이라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분위기였다. YS정권 때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투명해졌다.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권 전 최고위원과 동교동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무리한 인사청탁이 사라진 셈이다.”

실제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던 얘기들도 들려왔다. 당시 한 경제부처의 장관은 사석에서 “권 전 최고위원의 부탁이라도 10번 가운데 한 번 들어줄까 말까다”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여권의 J 의원은 “2000년 12월 소장파 의원들로부터 2선 퇴진 요구를 받고 물러난 이후, 비록 마포사무실을 내고 정치 일선에 돌아왔지만 권 전 최고의 파워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정치권에서 권 전 최고의 힘에 대한 평가는 앞서 말한 J 의원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DJ 집권 초기만 해도 그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던 여권 내부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다는 것이다.

송승환 편집위원

국책사업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구축' 전략적 육성

지역현안 점검

6.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순항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민선6기 출범 후 국책사업인 마이크로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대마산단, 송림그린테크단지 활성화로 미래성장 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군은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 700억원 규모의 디자인 융합 마이크로모빌리티 생태계구축사업



영광군은 지난 5월6일 송림그린테크단지 내 입주기업 16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e-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 사업 순조...2017년 준공 계획

대마산단·송림그린테크 활성화로 미래성장 동력 기반 구축

의 일환으로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군과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e-모빌리티센터 건립, 법·제도 개선과 장비 구축, 참여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주관 기업인 (주)동양기전을 비롯해 11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주)동양기전은 10개 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 4륜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대마산단에 입주한 (주)영신테크는 6개 기업과 함께 3륜 모빌리티를 개발 중에 있다.

군은 지난 9월 10일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한 뒤 2017년에는 완성된 모빌리티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e-모빌리티 센터와 4륜과 3륜 모빌리티 완성차 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영광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모빌리티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관련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어 대마전기자동차산단의 조기 활성화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마산단·송림그린테크단지 활성화 주력

영광군은 또 대마산단과 송림그린테크단지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마전기자동차산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은 투자유치진흥기금 200억원을 조성해 전



김준성 영광군수

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세와 입지·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2014년 대마산업단지에 1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984억원의 투자규모와 922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다. 송림그린테크단지에 17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남도 투자유치 대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체류형 관광축제 마케팅 적극 펼쳐

영광군은 또 향토산업인 상사화 관광자원화 및 미래산업화사업에 30억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영광찰보리 융복합 산업화지구 30억원이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역점과제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 웰빙관광산업 등 지속가능한 R&D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946억원 규모의 6개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고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관광수요에 대비해 4대 종교성지·백수해안도로 경관 관광자원화와 매년 50만명이 찾는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으



영광군의 대표 특산물인 영광굴비가 '201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15회 불갑산상사화축제는 관람인파 50만명의 발길을 모으며 성황을 이뤘다.

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민선6기의 역점 과제로 ▲함께 사는 복지사회 ▲역동적인 지역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감동 있는 문화관광 ▲꿈을 여는 평생교육을 제시하고 "마이크로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과 대마산단 등의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를 위해 타깃기업 발굴 및 개별방문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기업의 조기 투자실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중섭·장은영 편집위원

남악
시론

강병운
전남매일 서울취재본부
부장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호남 정치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패권주의가 공고히 되고 있다. 친노패권주의 타파를 외치며 호남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내겠다며 신당창당이 추진되고 있다. 박주선, 천정배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괴력은 아직 미약하다.

당 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 입성과 더불어 시작된 호남인사 소외로 인사탕평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대통합 정치는 헛구호에 불과했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편중인사의 심각성으로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특정지역 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람이 희망이다

그 이후에도 호남소외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부분에서 호남정치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 무기력증만 심화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답답한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호남정치력 복원과 호남인이 중심이 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물음에 봉착한다. 당장은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지역인물을 키워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포스트 DJ를 발굴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지역정치권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정치인과 정치권 자체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역민들의 의식을 들 수 있다.

정권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서 호남정치의 무기력증이 날로 고착화 되고 있는데도 지역정치권은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과 더불어 급속하게 쇠약해진 호남정치력은 이제는 친노패권주의에 기생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지역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주류인 이들에게 기대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 스스로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이 같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자신의 정치 유불리만 계산한 선택에 집중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열망과 민심에 보답하지 못했다. 정치 쇄신과 인적 교체가 쉽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득권은 고착화 됐고 변화나 쇄신 노력은 사라졌다.

또 하나는 지역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연돼 있는 패배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호남은 전국적으로 고립돼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다. 그리고 호남인들 스스로가 호남은 안된다고 체념 하거나 자포자기 의식은 물론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호남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나오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호남인재를 키우는 일에 너무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언론도 차세대 지도자들 에게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잘하면 격려하고 상처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특히 지역인재들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과 장점을 치켜세우고 격려해야 한다.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없다보니 영남 출신인 노무현 후보를 밀어 당선시켰고,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으나 패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대리만족 보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기억이 앞선다.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 승리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끝없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타 지역 인물을 밀어 승리하겠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듯이 호남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권창출을 위해 대장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 인재들을 적극 키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정치인 또는 단체장들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원
논단

이정현 의원의 교과서 발언과 호남 유권자의 분노



김연일
전남도의회 의원
(도당 대변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놀라움을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한 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줄(卒)로 보는 표현이다. 그의 발언은 야당은 말 할 것도 없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도저히 못 들은 척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아니 국정화에 찬성하는 국민일지라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막말'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한 지붕,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인간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발언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이 집권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우리 지역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란 점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 여당의 역사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어 지난달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고 말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북한사람' 또는 '빨갱이'로 바라보는 듯한 인식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여당 정치인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에서 우리 당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입지전적 정치인이다. 철옹성과도 같았던 지역갈등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한 순간에 대선 후보 반열

에 올랐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수준의 막말을 듣는 지역구민의 심정은 어떨까? 한마디로 속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발언에 분노한 순천시민들은 지금 소환 운동에 나섰다. 순천시역의 한 변호사는 그의 막말이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줬다"며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정치인들의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은 정치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정현 의원의 발언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국민과 지역 유권자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권력자의 입 맛에 맞는 국정교과서 옹호 발언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도 표현한 것은 자질을 의심케 한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좌경으로 매도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그의 지역 유권자들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과 판단능력이 있다면 이정현 의원은 순천시민과 곡성군민들에게 공개사과하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새정치민주연합 이 '효도' 하겠습니다.

하나. 불효자식 방지법

둘. 어르신 우선 취업법

셋. 옥매트 사기 금지법

넷. 틀니 보장법

다섯. 찜통, 냉방 방지법

여섯.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

일곱. 독거노인 의료지원법